

헌재 “尹,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 24일까지 제출하라”

계엄 선포 전 회의록 없다 했지만...尹대통령 측 회신 주목
“탄핵심판서류 등기우편 경호처 수취 거부”...송달절차 지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2·3·6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 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헌재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 시작해 10시 22분에 끝난 회의와 함께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께 열린 회의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의록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경우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떤 내용으로 회신할 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 전 송달을 통해 보낸 데 이어, 이날 오전 추가로 우편 발송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 준비 명령이 송달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실제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발송한(준비명령)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사건 접수 통지를 비롯해 계속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과 관련, 이 공보관은 “송달 관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이 수신했다는 확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헌재가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 31분께 도착했지만 ‘수취인 부재’로, 판자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 도착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로 각각 송달되지 못했다는 게 우체국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에게 송달이 안된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불가 방침에 대해 이 공보관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되고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도 가능하다”며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 유지를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또 “연구관 테스크포스(TF)가 재판관들의 지시를 받아 사실, 법리, 절차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가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과 관련, ‘계엄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공보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통치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배제할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광주 도심 찾은 ‘겨울 진객’ 큰고니 18일 오후 도심 근교 광주 북구 신원동 영산강에서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온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무리가 한가롭게 노닐며 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영산강(국가하천) 주변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비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이 찾아와 활동한다. /김애리 기자

검찰,尹 ‘내란혐의’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수사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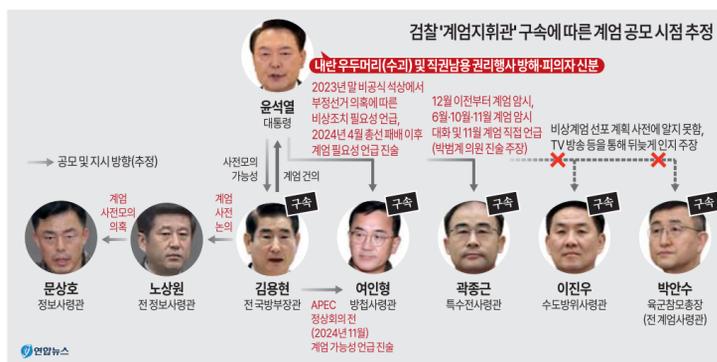
이상민 前장관 사건도 넘기기로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요청 철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의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

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날 협의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

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연합뉴스

Today
‘불법계엄’尹상대순해배상청구 6면
‘선결제릴레이’ 기록으로 남긴다 6면
기획·‘뺨코노미 시대’...뺨 장례 12면

희망2025년 새해엔 기부로 나눔을 가지 있게
광주전남을 가지 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전남도공공모금회

OK! Now Jeonnam 전라남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울타리 전라남도

2025년 1월부터 전라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1세(12개월)부터 18세까지 월 최대 20만원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1세가 되는 생일달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장소 정부24 접속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급대상	지급조건	지급내용
'24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하고 생후 12개월이 된 아동	출생아동과 부모 모두가 함께 전남에 거주	도수당 10만원 시군수당 10만원 *시군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